

제433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2. 철회 동의를 건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9)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행정안전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2
o 소위원장(양부남) 인사 2
2. 철회 동의를 건 2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9)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3
가. 행정안전부 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권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회의부터 새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권철승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그간 우리 위원회를 훌륭히 이끌어 오신 신정훈 위원장님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 재난안전, 치안, 지방자치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전반기 남은 기간이 길지 않지만 남은 기간 책임감 있게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하다 보면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쟁에 머무르지 않고 책임감 있게 논의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되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씀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우리 위원회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법률안 철회 동의를 건을 처리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10시34분)

○위원장 권철승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을 개선하여 양부남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소위원장(양부남) 인사

○위원장 권철승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소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경험과 경륜이 미천한 초선 의원인데 예결소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결소위원회의 임무를 잘 수행해 오신 위성곤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과 그간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소위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깊은 토론이겠지요. 이 예산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해 경제 피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추경예산안이 이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돼 있는지 심도 깊은 토론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철승 감동적인 인사말씀이었습니다.

2. 철회 동의를 건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9)

(10시36분)

○위원장 권철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를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동 법안을 발의하신 손술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법안 철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동 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법상 위원회에서 이미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있

어야 합니다.

동 법안의 철회 동의를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행정안전부 소관

(10시37분)

○위원장 권철승 그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세부적인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각 기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권철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행정안전부 업무에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중동전쟁은 단순한 대외 불확실성을 넘어 우리 민생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외 여건의 악화가 민생 현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 경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부담 경감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으로 195억 원을 편성하여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일경험을 제공하고 돌봄, 문화, 환경 등 공공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 6793억 원을 반영하여 각 지방정부가 민생안정, 지역경기 활성화 등에 신속히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확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철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어려운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서민의 삶을 지키고 중동전쟁에 따른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난본부 소관까지 총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의 증감은 없고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76조

9055억 4800만 원 대비 총 9조 5240억 4900만 원 증액된 86조 4295억 9700만 원으로 첫째,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4.8조 원 신규 반영,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195억 원 신규 반영, 내국세 추계액이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24.2조 원 증가함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예산을 각각 4.5조 원, 1404억 원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고유가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국민에 대해 소득·지역별로 차등화하여 10~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 4조 8251억 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선별기준, 지급시기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준비가 미흡하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히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목적에 맞게 정밀히 사업을 설계하여야 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선별기준 및 선별대상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지급수단과 사용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1.3조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차등적 매칭구조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 집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본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2억 원 편성돼 있는데요. 과거 집행 실적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겠고,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동일한 쟁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 예산이 보다 종합적·체계적 성과분석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195억 원이 증액 편성된 신규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경험을 제공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서 한시적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고 신규 사업 편성을 지양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고려할 때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둘째, 동 사업은 참여 대상을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피고용자 10인 미만의 비영리 법인·단체로 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기업과 일부 중

복되는 점이 있어 고용노동부가 청년 일경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에 보다 용이한 체계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세부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 형태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기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고용된 인력이 일경험 참여 청년으로 대체되는 등 동 사업이 사실상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보통교부세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내국세 추계액이 24.2조 원 증가함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보통교부세 예산을 4.5조 원 증액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총 채무액 규모 및 지방채 발행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추경안의 보통교부세 증액분의 일부를 자치단체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사업 또한 내국세 추계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예산을 701억 9000만 원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의 월별 집행 추이를 보면 연말에 교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대응 수요에 대한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시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등 특별교부세 운용방안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실,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손을 드신, 제가 지명은 여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지명 순서는 위원장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장관님,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 산불피해 추가 지원에 대한 얘기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고유가 피해지원 목적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부분, 이번에도 7 대 3, 8 대 2 이렇게 정하셨는데 지난번에 소비쿠폰 할 때도 예결위에서 9 대 1로 해서 지방에서 1조 700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달희 위원 그런데 그게 대체로 재난기금, 대구 같은 경우는 재난기금에서 당겨 왔

고 전북 같은 경우는 재해구호기금에서 당겨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부세를 많이 내리신다 해도 작년의 이런 빚진 거를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용처에 써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이렇게 생색내면서 항상 지방정부하고 협의하셨습니까? 매칭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예산 할 때,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할 때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득계층별 소비 증가 효과, 사용처 분석,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계량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엄밀하게 이런 돈을 다 풀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이 분석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항상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생색내기용 먼저 하고 지방정부를 끌고 오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산불피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불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1월 27일인가 결정돼서 지금 국회에 재건 지원 및 재건특위가 가동 중인 거는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피해 신고를 각 읍면동에, 경북 같은 경우에는 5개 시군에 33개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주민들이 연령대도 높고 이러니까 한 번 오시면 한 2시간씩 다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읍면동에 일반 행정직원들이 한 두세 명씩 배치되어 있으면, 엄청 많은 시간을 요하는데 저는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 입은 걸 관에 와서, 행정기관에 와서 다 털어놓는 자체가 트라우마 치료가 된다 생각하고, 피해 주민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력이, 일반행정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차출돼서 하니까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 그래서 돈은 이런 데 써야 되지 않을까, 한시적인 행정 임시직을 올 연말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임시직을 읍면동에 두세 명씩 배치해서 최저임금이라도 줘서 경력 보유하고 있는, 실직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청년이라든가 이 부분에 투입해서 충분히 들어 주고 통계를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소위 전까지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갖고 경북뿐만 아니고 경남 울주까지 다 해서 강화 대책을, 인력 지원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아까 2개·3개 얘기한 것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결정을 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추경예산안을 준비해 왔다는 점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구요. 지방정부와 평상시 같았으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겠습니다만 지금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단체장께서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신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기보다는 부단체장들과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협조와 의견수렴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작년에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서부터 연구용역을 줘서 4월 말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충분히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시다만 중간 보고된 내용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충실하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서 소비 심리도 상당히 회복이 되었고 또 실제로 소상공인 매출 또한 감소 추세에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불피해 추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접수 창구에 인력 수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업무 부담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양부남 위원 우리 전남·광주가 이번에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됐고 이제 7월 1일이면 새로운 통합특별시가 발족이 됩니다. 그런데 통합특별시가 발족하기 전에 6월 말까지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필요하고 거기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남·광주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140억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걸 전남광주특별시가 7월 1일 전에 모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통합특별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통합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 발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543억이라고 합니다, 광주에서 뵈은 게.

그러면 이 전쟁추경인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과 통합특별시 기구 개편 안착을 위한 예산이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예산이 추경에서 민생예산이고, 이러한 민생예산을 잘 적절히 집행할 수 있는 곳은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광주·전남 320만 인에 대한 이 민생예산이 잘 쓰여지려면 이걸 집행할 수 있는 전남광주특별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기구, 어떠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추경예산에 이러한 전남광주 특별시 준비를 위한 예산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말씀에 저희 부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경이 없었다면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기왕에 추경을 하는 상황에서 이 추경예산안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에서 추계한 내용은 광주시나 전남도에서 추계한 내용과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광주·전남에서는 543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계한 결로는 177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재정 당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당국에서는 이번 추경 사항이 아니더라는 이유로 수용을 하지 않았습시다. 그런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추경예산이지 않습니까? 민생을 쫓아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련이 되고, 금액이 543억하고 170억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자치단체의 의견을 잘 들어서서 이번 예산안에 넣어 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관님, 대답이 약간 긴 것은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제가 가이드를 해 드릴게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해서 청년일자리 인건비 195억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게 19세에서 34세 중 미취업자 2500명에게 월 260만 원씩 올 연말까지 5개월치를 한시 지원한다라고 하는 건데.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시면,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 하는 동시에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발표된 것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명칭이 일경험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일경험. 물론 청년들에게 경험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체 5개월짜리 그 인위적이고 한시적인 일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의해서, 공공기관도 있지만 기업에 의해서 창출이 되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일경험이라고 하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해답이 되기보다는 청년들을 한시적 몇 개월짜리 포퓰리즘 정책으로 우롱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첫 번째로 장관님이 생각하는 그 일자리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진짜 이런 5개월짜리 한시적인 것을 좋아할는지 또 5개월 시한이 다 돼서 예산 지원이 끝났을 때 그 상실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간단히……

○고동진 위원 나중에 제 질의 끝난 다음에 이것 답을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고동진 위원 나중에 끝난 다음에요.

아, 그래요. 짧게 얘기합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이 사업이 만들어졌다면 제목부터가 청년일자리 사업이 됐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경험인 이유는 이런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그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자리로서의 한 자리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창업의 의욕까지도 가질 수 있도록……

○고동진 위원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서 장관님이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지적을 해 드릴게요.

이게 기본법이 아직 국회 통과도 안 됐어요.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예산부터 편성하는 게 온당한 건지 제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리 정부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행정안전부로 결정을 했고요.

○**고동진 위원** 그리고 이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고용노동부가 일괄적으로 해서 통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검토의견도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고용노동부에서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게, 물론 저는 반대의견을 내서 꼭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개념도 애매모호하고 관련 법이 통과되지도 않고…… 각 지역에다 돈을 쥐 가지고 단기 일자리 경험을 한다 이것 자체가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최소한 법이 통과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 사업 대상자가 19세에서 34세 중에 미취업자 2500명 밝히고 있는데 예외 사항을 또 두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지자체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신안군에서 19세에서 49세로 조례 정하면 나이가 어린 청년 아니어도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물론 그 지역에는 청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각 지역에 청년이 없어서 그렇게 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 조례로 50세, 60세까지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거면 뭘하러 이것 청년 사업이라고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닙니다. 청년으로 규정하는 최고 연령이 지금 예를 든 신안군의 39세입니다.

○**고동진 위원** 40세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39세입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요, 39세든 40세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리고 청년기본법 자체에 이미 지자체의 조례로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지역에 청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을 포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이 사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타이틀은 청년으로 해 놓고 정작 청년들을 이용하는 그다음에 행안부가 일자리 사업에 전문성도 없는 곳에서 지역에 돈 나눠 주는 그런 포퓰리즘이 아니냐.

저는 이 사업이 하여튼 명분이 좀 명확하지 않고 실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5억 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의견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께서 그렇게 삭감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

감스러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 이후에 청년 고용 사정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동전쟁에 따른 고물가 또 고유가 위기는 특히나 취약계층에 더 어려움을 초래할 것인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계층이 바로 청년계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년 고용률은 40%대로 내려가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긴박한 필요에 의해서 청년에 대한 일경험 사업을 예산으로 정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우리 위원회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만 법사위에서 지난번 회의에서 숙려기간이 도과되지 않아서 계류됐을 뿐이지 곧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제가 소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청년일자리, 특히 이런 문제들은 전문성 가진 정부부처,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 이게 옳은 생각이죠. 지금 행안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정부에서 집행을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만들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철승** 예산소위에서 충분히 토론하실 기회가 또 있으시니까요 그때 또 충분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장관님, 야당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런 경제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거의 KDI 분석 예를 들어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 당시 코로나였잖아요. 그 당시에도 투입 자원 대비 최대 36.1%의 추가 소비를 창출했다, 그리고 민간소비가 1.5% 반등했다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2025년, 작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3분기 민간소비를 최근 3년 내 최대폭 1.3% 했다는 또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전쟁이나 여러 상황에서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이게 사용처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비라는 것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지난번도 약간 비슷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나 대형프랜차이즈 같은 데 사용을 앓고 주로 30억 이하의 전통시장이나 편의점 등 소상공인 매출에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아마 지난번에도 거의 30% 정도의 매출이 증가하는, 그래서 골목상권과 영세사업자에게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요. 아까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지방정부 간의 격차. 국비 지원 같은 것은 저번의 보조율 같은 경우 2025년 서울 같은 경우는 70%에서 75%, 지방 같은 경우는 80%에서 90%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70%, 80%로 일단 했는데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서울과 지방을 70%, 80%로 이렇게 국비 지원율에 차등을 둔 것은 지방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차등을 둔 것입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게 국채 발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세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재정적 여력이 지난번하고 다른 것 같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 특히 지방교부세가 약 4.5조 정도 규모로 증액이 돼 가지고 지방정부에는 지난번보다 좀 여력이 있다는 그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세입 자체가 증액 추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방교부금으로 충분한 예산이 내려가게 됩니다.

○**채현일 위원** 또 하나 추가적으로요. 그런데 지역별로 차등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의 공주와 부여 인접 지역이고 인구소멸지역인데 차등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세분화되고 또 그런 지표 같은 게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약간 불투명하다. 또 주민들 간의 수용성 측면에서 이게 좀 설득력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미 기획예산처에서는 작년부터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여건이 더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아동수당 지원 비율을 더 높여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채현일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 목적은 고유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하려니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계된 건 소득 그리고 지역으로 획일화시켜서 구분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차등을 둔 것이지요.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차등을 뒀지만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보다는 소득이나 지역에 따라서 차등화시켜 버린 거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70%지요, 소득 기준 70% 이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70% 미만입니다.

○**서범수 위원** 지난번에는 얼마였습니까, 지난번에 민생회복? 90%인가 그럴 건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90%……

○**서범수 위원** 왜 이리 왔다 갔다 합니까? 이러니까 자꾸 어떤 정확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난번에도 정부에서는……

○서범수 위원 잠시만 들어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정부에서는 70%를 내놔습니다.

○서범수 위원 정확한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 없이 확실화시키고 차등…… 물론 어떤 소득이나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등화를 뒀다 하더라도 이러니까 자꾸 지방선거용 매 표행위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좀 빠진 게 있다고 봅니다, 핵심적인 게. 진짜 고유가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다.

예를 들면 화물차 운전자나 택시, 택배 그리고 푸드트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사람들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대로 별도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없어서 그래요. 다른 데도, 다른 부처도 찾아보니 이런 부분들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서 다시 재설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금 80 대 20이지요? 지방비가 20% 들어가지요, 서울을 제외하고는? 20% 들어가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그러면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 정도 됩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차등화시켰단 말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 중에도 인구감소지역, 인구소멸지역 이런 식으로 지금 차등화시켰어요. 그렇지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이렇게 되면 많은 혜택이 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이거야말로 전형적으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설계되고 공은 중앙에서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부담만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가 지적이 돼서 하다가 결국 9 대 1 정도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더 열악한 지역일수록 지금……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런 열악한 지역일수록……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역일수록 저희가……

○서범수 위원 국비를 더 많이 부담을 시켜야지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일반교부금……

○서범수 위원 인구소멸지역,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재정은 더욱더 취약할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은 50을 줄 테니 너희는 그 50에 대한, 20%를 부담하려면 더욱더 큰 포션이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지방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도 그것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서범수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결국은 9 대 1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서 설계를 해 보셔야 된다. 왜 자꾸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방에 부담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런 후폭풍이 있다고요, 분명히. 그걸 한번 챙겨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부대비용으로 52억 7500만 원 별도 배정되었습니다. 지난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는 얼마입니까? 한 500억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 없어졌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당시에 민간시스템을 임차해서……

○**서범수 위원** 그때 500억 들어갔고요. 또 이것 지금 한다고 52억 들어간대요. 뭘니까, 지금 도대체? 그 500억을 들인 시스템은 어떻게, 다 폐기한 겁니까?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지 왜 새로 한다고 다시 52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사실 500억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시스템 비용은 제 기억으로 는 이번에……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담당 인원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번에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범수 위원** 담당 인원도 새로운 인원이 들어가서 TF를 만든대요. 이거 왜 이래요, 행정이라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행정 아니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한 삼십……

○**서범수 위원**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 민생회복 그 시스템의 TF팀하고 지금 TF팀이 또 다르대요, 시스템도 다르고. 왜 그때그때마다 이게 바뀌는 겁니까? 만약에 장관님 돈이라면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까, 돈을?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것이 항상 매년 집행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예측하였다면 그렇다면 시스템을 고정해서 만들어 놓겠지만……

○**서범수 위원** 그래도 지난번에 500억이 들었으면 그 시스템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500억이나 들여 가지고 뭐 했어요? 그 시스템 어쨌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500억이 아니라니까요.

○**서범수 위원** 지난번에요? 민생회복 쿠폰 때요? 500억 들어갔어요, 내 기억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작년 90억이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좋다, 90억이라고 칩시다. 90억이라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시스템 구축 비용인데요.

○**서범수 위원** 다 합쳐서 500억이 들어갔다고요, 시스템 구축비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그 시스템 구축한 90억짜리가 어디 갔습니까? 이때 사용하면 되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당시에 계속 사용할 용도로 구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스템 임대했던 것이어서……

○서범수 위원 나중에 소위 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리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타 부처 추경예산안이라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산업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통해서 일단 피해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고가격제 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지원할 때 부담금 퍼센티지 정할 때,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위원장 권철승 그런 부분들을 어떤 때는 자립도를 기준으로 하고 어떤 때는 자주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게 좋다는 생각을 저도 평상시에 좀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철승 서범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장관님, 정부의 발 빠른 추경 편성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국채 발행 없이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추가로 확보된 세수를 갖고 편성하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 4조 800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 깊이 공감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실제 체감효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 방식과 집행 속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범정부 TF에서 지급수단과 사용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논의 중이고요. 최소한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는, 그러니까 최종 추경안이 완성돼서 통과되는 그 안에 맞춰서 최종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 통과 후까지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위해서 사퇴하는 시도도 꽤 많은데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리고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정춘생 위원 죄송합니다.

서범수 위원님의 지적에 저는 일정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소득 기준과 수도권·비수도권 그리고 인구소멸지역 차등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부담이, 역시 많이 지원할수록 재정력이 약한 인구감소지역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또한

가는 것이어서 저는 국비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비 지원율에 대해서 80%까지를 지원 상한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올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면 이번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이걸 한시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추경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비·지방비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좀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법을 고쳐야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법을 고쳐야 될 필요는 없고요.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것은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정춘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을 말씀하실 때도 어쨌든 집을, 다 주택 보유자를 손해를 보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파는 것이 이익이 되게끔 하는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정책, 과감하게 저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것도 저는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대표님도 얼마 전에 그러한 입장을 발표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검토할 의견은 없으십니까, 정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중교통의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그런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오늘 기사를 보면 지금 호주 총리도 ‘유가 충격이 몇 달간 지속될 듯’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검토한다는 호소문도 발표한 게 기사 났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딱 한 가지, 그리고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저는 다른 부처 예산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또 서범수 위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것이 이 유가 지원이 지금 보면 생계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로 화훼 농가 그리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분들은 생계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거나 이런 농가들이 많다 이런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 농가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농해수위나 편성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말씀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국토부 예산으로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확대해서 대중교통 이용 시에 환급금 비율을 최대 83%까지 늘려 주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시설농가, 어업인들에게 면세유 또 면세경유에 대한 가격 보조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요. 또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비 보조예산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장관님, 이번 중동 사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그리고 IMF 위기 때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국민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동의합니다.

○**이재관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중동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별도로 추계해 보지는 않았습니니다.

○**이재관 위원** 제가 우문인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피해가 아니라 장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호르무즈해협이 장기간 봉쇄될 경우 산업연구원의 대응 시나리오를 보면 유가는 150에서 180불까지도 인상될 수 있을 것이다, LNG 가격은 200%까지도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비가 최대 11.8%가 오를 수 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경보 단계 이상의 위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중동의 사태가 우리의 물가라든지 하는 부분에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위험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닥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대응하는 것이…… 저는 지금 현재 정부가 차량 5부제라든지 하는 그런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차량 5부제 같은 경우는 석유의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것일 뿐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재관 위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지금 현재 차량 5부제의 그러한 수준에서 저는 더 앞서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재 현장에서는 쓰레기봉투 사재기, 그러한 어떤 불안심리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내용을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저는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그런 시책이 앞으로 병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습니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담 비율과 관련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분담률과 관련해서 현재는 수도 서울과 기타 지역으로 나뉘져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렇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도 보면 특별지원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대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 안에서의 어떤 차이도, 격차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한 가지 보니까 인구감소지역 중에 특별지원지역의 평균이 8.9%입니다. 이런 지역에 기타 지역과 동일하게 80%의 지원 20%의 부담, 이럴 경우 실제로는 기존에 했던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담률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오히려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합리적인 안을 제안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재난지원금이 이번까지 포함했을 때 한 네 차례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가구당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별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해답이, 하여튼 제삼자로 봤을 때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닌가. 어떨 때는 가구당 어떤 때는 개인별,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의 경우를 저는 세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적합한 대안을 통해서 합리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리 평소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법인세가 14.8조 그리고 증시 활성화를 통한 증권거래세가 10.3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규모는 26조 2000억 원인데 이 중에 1조는 또 국채를 상환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국채 상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방정부도 사실 교부세를 활용해서 이달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지방의 지방채 상환 이런 것에도 좀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초과세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체의 한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40%입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서울은 70%이고 서울 외에는 80%인데 지방이 일종의 초과세수로 인한 없던 교부세가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꼭 국가사업이라기보다……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현재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을 해 달라는 요

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지방정부가 이렇게 동참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동참을 하지 말라고 해도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초과세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추경을 하는데 지방에 매칭 부담을 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크게 과히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 부담률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추계를 어느 만큼, 추계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재정력이 약한 농촌지역에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산식 자체가 교부세는 재정력이 약한 데에 더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이 될 건지 아니면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런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차제에 재정 조정을 하는 그런 면밀한 대책 같은 것을 좀 세워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가 그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소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 일경험 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피고용자 10인 미만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비영리단체도 포함됩니다.

○**이해식 위원** 어떻게 보면 비영리 법인·단체에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해식 위원** 그러면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고 또 진흥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지금 청년의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게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한 사업 목적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일거양득인 사업인 것 같은데 고동진 위원님께서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왜 예산편성을 했냐,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이미 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다만 행안부가 주무부처이다 보니까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의한 예산편성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고동진 위원님 말씀은 조금 오해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청년일자리 문제는 워낙 심각해서, 일반적으로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청년과 관련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관대한데 위원님께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까 싶은데요.

○서범수 위원 추가로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권철승 두 분이요? 원래 토론 추가는……

○서범수 위원 아까 하기로 했잖아요, 5분 하고 추가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장 권철승 추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철승 제가 두 분만 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혹시 여당 측에서도 추가로 하실 분 계신가요?

○윤건영 위원 할게요, 하시면.

○위원장 권철승 그러면 감사님들 하시고 고동진 위원님 마지막에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장관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은 전쟁 추경이라면서요. 그렇지요? 고유가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추경인데 뜬금없이 이게 왜 끼워져 있습니까? 그 가요, 무슨 노래더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것하고 비슷해요, 지금.

법에 대한 기본 근거가 청년기본법 그리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것을 근거로 두시는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일경험, 뭐 이러이런 시범사업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진짜 이 사업 목적이 뭐니까, 장관님? 진짜 청년일자리입니까, 아니면 지금 장관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시려고 이것을 집어넣는 겁니까? 장관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 갖고 계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이 추경에 이것을 집어넣는다는 게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목적과 요건에 맞다고 보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죽하면 국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서 한시적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고 신규 사업 편성을 지양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고려할 때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다’ 지금 국회 전문위원들도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번 추경의 목적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25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2500명이라는 숫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답변드릴까요?

○서범수 위원 장관님 말씀하시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이게 몇 개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뭐 많습시다만……

○서범수 위원 왜 하필이면 2500명입니까,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중에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의 수가 약 2만 8000개……

○서범수 위원 그래서 10%, 2500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이나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은 뭘니까? 이것은 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런데 행안부에서 다 총괄적으로 한다면서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자활기업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서범수 위원 왜 2개만 끼우고 다른 것은 왜 안 합니까, 또? 왜 그랬어요? 뭔데요? 왜요?

아니, 장관님 말씀이 늘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하겠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래서 10인 미만 법인·단체를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 끼우시든지, 왜 마을기업이랑 협동조합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다른 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뻔 것입니다.

○서범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마을기업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협동조합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협동조합은 기재부 사업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나중에 소위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까만 이것……

○이광희 위원 장난친다고 그러는 건 너무 심하십니다. 예산 가지고 장관한테 장난친다는 게 뭘니까?

○서범수 위원 예?

○이광희 위원 장난친다고 하는 것은 좀 심한 것 아닙니까, 발언이?

○서범수 위원 제가 장난친다고 합니까?

○이광희 위원 지금 장난친다고, ‘장난칩니까?’ 이랬잖아요.

○서범수 위원 내가 무슨 장난을 친다고 했어요?

○고동진 위원 위원 얘기하는데 그것 왜, 서로 자제합시다. 서로 자제를 해야지, 질의시간에 하는 건데.

○이광희 위원 말도 함부로…… 아니, 장난친다는 얘기까지 듣고서 그것 거론도 못 합니까?

○서범수 위원 여하튼 장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게 하시잖아요.

○이광희 위원 ‘장관님 장난칩니까?’가 뭘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무슨 답변을 이상하게 드렸다고 그러세요?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추정하고 안 맞다, 지금.

○위원장 권철승 위원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지금……

○서범수 위원 본예산에 넣으세요, 본예산에.

○위원장 권철승 서범수 위원님, 예산소위에서 좀 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쉬었음 청년이 75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75만 다 하세요.

○**위원장 권철승** 자세한 내용은 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추경에 맞는 걸 갖고 와야 되지.

○**위원장 권철승** 다음,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건영 위원** 구로율의 윤건영입니다.

장관님, 방금 이야기 이어서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사업하고의 중복 문제를 몇몇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윤건영 위원** 고용노동부는 10인 이상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행안부는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이라서 구별되는 것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리고 청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청년 고용률이 22개월째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위기가 도래하면 가장 고통받고 어려운 곳이 청년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중동전쟁 추경예산에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잡아 놓은 것 맞지 않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정말 없는 빚이라도 내서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닐까 싶습니다.

○**윤건영 위원** 맞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마중물을 부어 놔야 이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불 끄는 게 추경입니다. 그래서 앞서 장관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고용가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지원금들을 내놓는 게 맞지요.

그러나 그중에서 일부 자금들은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청년세대들이 고통받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청년들 쉬었음 부분, 작년만 가더라도 42만 명 정도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는 그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세수가 좀 늘어서 그 여유가 생겼는데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윤건영 위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잘해서 초과세수, 즉 위기 극복의 결과물로 초과세수를 만들어 냈던 거고 그 세수를 가지고 지금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을 할 때는 당연히 위기 극복에 사용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성장의 재순환을 위한 마중물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울러서 저는 어차피 청년일자리 추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왕 하시는 거 맞춤형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경험·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지원

이라든지, 회복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나뉘져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시에 갈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치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동감입니다.

○윤건영 위원 10초 남았는데요. 끝으로 청년 스타트업 지원 그리고 사회연대경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각을 달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토론 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은 좀 다르게 보시면 오해하거나 또는 왜곡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오히려 청년들에게 스타트업 지원하는,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을 청년들이 한 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명이 모여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창업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또 지역에 활력을 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철승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추경 요건이 이렇게 죽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초과 세입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고동진 위원 저 발언하기 전에 신상발언 1분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철승 짧게 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 제가 먼저 국회를…… 기업에 오래 있다가 국회 들어온 이유가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내가 장관께도 여러 가지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할 거면 제대로 하자, 그다음에 일자리 경험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연말까지 5개월 이렇게 하고 지원 예산은 끊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그것을 사실은 지적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정책 위주로 해서 내가 이야기했던 것을 반박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전체회의에서 위원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

안 들은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철승 토론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일단 서민층 이중 부담, 고유가 이런 것으로 해서 4조 8252억 배정했어요.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게 고유가로 인해서 서민 피해 규모가 높고 여러 위원님들이 마침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이게 분석한 자료가 있나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맨 처음에 행안부에다가 문의하니깐 ‘이거 알고 있는 바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서민 피해 규모가 인당 12만 5000원 정도 재정부에서 얘기를 한 것을 행안부에서 전달받았다. 그러니까 지원금 산출 기준과 실제 피해 규모 연동 여부에 대해서도 예산처가 재정부 안을 보고 상정했고 행안부는 전달받은 사업이다, 전체적인 정책 그림에서 결정된 부분이 크다’ 이런 식으로 일단 답을 받았습

다.
일단 행안부가 피해지원금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없지요,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금 불과 한 달 전에 벌어진 전쟁이고요.

○**고동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워낙 시급하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또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효과 검증이라든가, 그런데 일단 재정부터 투입을 해야 할 만큼 시급한 것은 이해는 하는데 나중에라도 명확한 산출 근거하고 경제적 효과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당연합니다.

○**고동진 위원** 장관께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부담 인당 12만 5000원에 대한 산출 근거, 소득계층별·지역별 지원 차등 금액에 대해서 그 산출 근거를 지금은 파악을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나중에라도 이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놓으셔서 가지고 다음에 예산소위 전에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자료가 있다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아니, 지금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은 계속 바뀌는 내용이지요. 그다음에 이 영향이 언제까지 갈지도……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라도 나중에 변경이 될 수 있는 사안임을 전제로 하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또 추경 산출내역에 대해서 시스템 운영비 부대비용으로 53억 원이 배정됐어요. 여기 운영비, 간담회비, 출장비 다 포함돼 있고 과거의 소비쿠폰 등과 유사한 사업에도 협의회 30회, 간담회 60회, 출장 10회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가 7000만 원이 지급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비, 간담회비, 출장비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세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절감이 가능한 항목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소위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철승** 이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추경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에 양부남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모경중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그리고 박덕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은 서면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고동진 권칠승 김성희 박덕흠 박정현 서범수 양부남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재관 이해식 정춘생 채현일

○청가 위원(3인)

모경중 신정훈 용혜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자치혁신실장 진명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송경주

자연재난실장 김용균

정책기획관 이지성

기획재정담당관 신지혜